

## “재유행 시도내서 하루 3000명 확진”

## 4·3중앙위원회 제주 개최 성사되나 20일 일정 놓고 행안부·국무조정실 협의 중

도, 코로나 재유행 대비 단계별 대응책 발표  
최대 453명상 운영... 윈스톱 진료기관 확대

제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병상 확충, 윈스톱 진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재유행 대비 대응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도청 3층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도 방역당국은 재유행 흐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일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에서는 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도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맞춰 단계별 의료대응 체계를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

우선 전담치료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내 확진자가 일일 75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1단계’, 일일 1500명 이상을 ‘2단계’, 일일 3000명 이상을 ‘3단계’로 설정했다.

이 단계에 따라 1~2단계의 경우

191병상(국가지정 병상 55·일반격리병상 136)을 운영하고, 3단계에는 최대 453병상(국가지정 병상 262 재지정 및 즉시 가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격리병상 확대 지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조속한 병상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제주지역에선 국가지정 전담병상 총 55병상 중 47.3%인 26병상을 사용 중이다.

재택치료 대응도 지속 유지한다. 특히 호흡기 증상자 진료와 검사,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윈스톱 진료기관’을 현행 92개소에서 159개로 확대한다.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금 등을 안내하는 행정안내센터는 행정시별로 각각 1개, 총 2개소가 꾸려져 있으며,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시 도내 약국 11개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 1개소(183병상)를 확보

했으며, 병상 가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해외 입국자 등을 위한 임시 격리시설(숙소)도 지정(4개소·23실)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도내 고위험군 환자 1만2500명·231개소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의 치료와 격리를 담당할 신속대응 전담대응팀(10팀·68명), 의료기동 전담반(2팀·6명)이 가동된다. 또 내달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현장교육과 정신질환자 감염병관리 격리병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집중관리와 보호에도 나선다. 보건소, 읍면동, 관련기관과 인적자원망 등을 활용해 격리자 긴급지원, 건강상태 확인·연락, 의심환자 병인 이송 등의 윈스톱 프로세스가 가동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대책반 운영 총괄은 도와 행정시가 맡으며, 실행 프로세스 컨트롤타워는 읍면동사무소가 담당하게 된다.

또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교육청-학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실무협의체’가 주 1회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여름철을 맞아 이동과 사회적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BA.5 검출률이 증가하면서 재확산 기로에 놓여있다”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제주를 안전하고 청정하게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정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 4·3 중앙위원회)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앙위원회 발족 22년 만에 제주 개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제30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오는 20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라고 한리일보에 밝혔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발족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게 되며, 제7차 유족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된 인원

에 대해 유족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4·3중앙위원회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국회 추천자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 쯤 제주4·3중앙위원회 제주 개최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4·3중앙위 제주 개최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4일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해외 입국자 공항서 바로 코로나19 검사

어제부터 제주공항에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받아야... “접근성 제고”

제주국제공항에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마련됐다. 앞으로 제주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국제선 운항 재개와 입도객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제주국제공항에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설치,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공항, 김해공항에 이어 마련된 제주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로 입국할 때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최대 1000건의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항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하게 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대책’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1일차에 받아야 하며, 검사자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또한 입국자는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고 등록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주공항 주차장(기존 제주공항 워크루 선별진료소)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3일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7189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350명)보다 11.7% 증가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www.incheonilbo.com

### 언론다운 언론 소통하는 인천일보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우리는 인천일보입니다.

열정적인 취재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일보

제주 코로나19 신규 720  
잠정 집계 14일 누계 24만5616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